



12면

임인년, 호랑이는 복을 신고

2022년 2월 9일 수요일(음 1월 9일) 제2956호

# 전주매일

www.jjmaeil.com

비수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흥자천변 2길 6번지

대표전화(063)288-9700

## “사고 발생 전 사소한 징후 발생”

아파트 공사 현장 붕괴 사고 등 건설현장 안전성 우려 높아짐에 따라 송하진 도지사, 군산 주택건설현장 찾아 점검… “도민 안전 최우선” 강조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아파트 붕괴 사고로 건설 현장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송하진 전북도 지사는 주택 건설 현장을 방문해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송하진 지사는 8일 구조·설계 분야 민간 전문가 등과 함께, 군산시 소재 아파트 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전기준 준수 여부 등을 꼼꼼히 살피면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비와 주의를 당부했다.

송 지사는 또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듯이 커다란 사고 발생 전에는 사소한 징후들이 먼저 나타난다”며 “시공사와 김리단 등이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최일선에서 사고 예방에 힘써달라”고 말했다.

송 지사는 이와 함께 “노동 집약적 인 현장으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 높은 현장을 김안해 소통을 통한 안전관

리와 코로나19 감염자 확산 방지를 위해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점검에 앞서 전북도는 아파트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도민관 합동 점검단을 구성해 도내 공사 중인 아파트 53개 단지를 집중 점검해 왔다.

도는 구조붕괴에 취약한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적정 여부를 비롯해 타워 크레인 등 현장 시설물의 안전 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한 결과, 광주 사

고와 같은 구조적 결합 또는 시공상 중대한 하자 등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총 97건의 지적사항을 발령한 뒤 시정을 명령했다.

콘크리트 규열 발생 등 보수·보강이 필요한 34건에 대해서는 2월 중에 마무리할 것으로 통보했으며, 슬라브 철근 간격 미준수 등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 시정조치 하도록 했다.

도는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 T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도내 건설 현장 694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도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거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주적 관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더불어 올 하반기에 구조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전라북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취약한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안타까운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타 지역에서 반복되는 만큼, 모든 분야에 대한 선제적 현장관리와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며 “도민 안전을 도정의 최우선으로 지속적인 정책·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미루어렸다. /유호상 기자



송하진 전북도지사가 8일 군산시의 한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을 방문해 ‘주택 건설 현장 안전점검’을 하며 관계자들과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 도 농관원, 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26곳 적발

농산물 12·가공품 9·축산 5건 순… 대보름 맞아 오늘부터 25일까지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문태섭 이하 전북농관원)은 설 명절을 맞아 지난달 3일부터 28일까지 26일간 관내 제수·선물용 농식품 제조·판매업체 1,100여개소를 조사해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26개 업소(거짓 표시 19, 미표시 7)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위반품목은 당근, 데쳐 등 농산물이 12건(46.2%)으로 가장 많았으며, 농산물기공품 9건(34.6%), 축산물 5건(19.2%)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업소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9개 업체는 형사처벌을

받았고 2월 9일부터 15일까지 경과류, 나물류, 잡곡 등 수요가 증가하는

품목에 대해 원산지 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전북농관원 담당주무관은 ‘소비자들께서 농식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위인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r.kr)으로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으로 적발될 경우 표상금(5만원~1,000만 원)이 지급된다.

/최대희 기자

### 자치분권 2.0시대 핵심축

## 지방의회 역량 강화 산실

행안부, 전북혁신도시서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  
지방의원 대상 의정아카데미 과정 확대·교육 다양화

행정안전부는 8일 전북혁신도시에 있는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서 지방의회 전담 연수기관인 ‘지방의정연수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도는 특히, 지난 1월 중대재해 TTF팀을 본격 가동하고, 전라북도 중대재해 예방 대응계획’을 수립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적극 대비하고 있는 상태다.

도는 아파트 공사 현장 외에도 전문가 등과 합동 점검반을 꾸려 도내 1억 원 이상 하천 도로, 건축 등 도내 건설 현장 694개소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

도는 또,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등 중앙부처 합동 표본점검을 2월 중에 실시해 점검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거쳐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주적 관리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더불어 올 하반기에 구조

기술사, 건축사 등 전문가를 채용해 전라북도 건축물 안전점검 추진단도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의회 사무위원회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등이 담당하고 있는 전문 분야별로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할 예정이다.

전북도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개소식에서 “지방자치 2.0이 본격 추진되는 올해에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담 연수기관이 개소돼 그 의미가 크다”며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과 지방의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연수를 통해 지방의회의 역량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봄철 산불방지 ‘총력전’

### 권역별 진화용 임차헬기 배치·감시원 운용 등

전북도가 산불 대책본부 설치 운영을 앞당기고, 주요 권역별로 산불진화용 임차헬기를 배치하는 한편,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운용 등 봄철 산불방지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고 8일 밝혔다.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에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해 산불 예방 활동과 초동 진화 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총력을 다 한다.

도는 부주의로 인한 산불발생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정월대보를 등 주요 시기별 맞춤형 특별대책과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운영으로 산불발생에 대비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산불 예방과 진화체계 구축을 위해 248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산불 취약 등산로 입구, 산 연접 도로변, 입

카메라를 가동한다.

아울러, 산불 초동 진화를 위해 임차 헬기 3대를 도내 권역별로 분산 배치해 산불 현장에 신속하게 투입, 초기에 진화함으로써 대형산불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진화체계를 갖춘다.

도는 산불초점 기간 동안 임산통제 구역 327개소 8만9,000㏊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82개소 442km의 등산로를 폐쇄한다.

2월 말까지 고춧대, 깻대 등 영농부산물 피해 저감작업 등으로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산불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3~4월 중에는 소각금지 기간을 정해 불법소각 행위를 단속한다.

임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입산한 자, 허가받지 않고 산림 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등은 10만원부터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방화죄 및 실화죄 등 혐의 조치한다.

/유호상 기자

좀 더 낫게,  
좀 더 가까이!

민생을 살피고, 군민에게 좀 더 낫게·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무주군의회  
MUJU-GUN COUNCIL